

#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2006. 10

#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2006. 10

---

김 국 신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 영 호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배 정 호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여 인 곤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최 춘 흙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 목 차

I. 문제제기 .....	1
II.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상 실태 .....	2
1. 2차 북핵 위기와 6자회담 .....	2
2.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대북제재 .....	5
III. 북한 핵실험과 동북아 4국의 반응 .....	7
1. 북한의 핵실험 실시 .....	7
2. 동북아 4국의 반응 .....	8
IV.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	12
1.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	12
2. 대북제재에 대한 각국의 입장 .....	15
V. 정책적 고려사항 .....	20

## I. 문제제기

-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핵개발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자 북한은 2002년 10월 우라늄농축 핵 프로그램을 시인하고 북·미 직접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요구함.
  - 그러나 미국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6자회담을 통한 핵협상 진행
  
- 부시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2005.2.10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및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
  -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하여 협상용으로 무시하는 경향을 보임.
  
- 중국, 한국 등의 압력·설득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 제4차 회담 (2005.9.13~19)에서 북한의 핵 폐기, 북·미관계 정상화, 경제협력 증진 등을 담은 '9.19공동성명'이 채택되었으나, 북한의 위폐문제로 인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6자회담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짐.
  
- 북한은 2006.7.5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어 압박이 강화되자 2006.10.3 핵실험을 선언하고 6일후 핵실험을 단행함.
  - 10월 9일 오전 10시 35분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인공지진 발생
  
- 본 보고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실태를 검토하고, 북한의 핵실험 의도 및 이에 대한 동북아 4국의 반응을 논의한 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내용 및 각국의 입장을 분석하고자 함.

## II.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상 실태

### 1. 2차 북핵 위기와 6자회담

-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이 몰락하자 체제 유지를 위해 핵개발에 착수한 북한은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여 핵문제를 협상카드로 사용함.
  - 핵무기 개발 자체를 포기하지 않은 채, 핵개발 문제를 체제안전 보장, 경제지원 확보 등을 위한 외교적 협상수단으로 활용
  - 협상과정에서 북한은 ‘벼랑 끝 전술’로 상대측의 양보를 추구
  
-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1993.3.12)으로 고조된 제1차 핵 위기는 3단계 북·미 고위급 회담을 거쳐 제네바합의를 체결(1994.10.21)함으로써 일단 해결국면으로 진입함.
  - 그러나 북한은 제네바합의 이후에도 비밀리에 핵개발 지속
  
- 2001년 1월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 한 후, 핵·미사일·재래식전력문제 등을 북·미대화의 의제로 제시함.
  - 반면, 북한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 발언에 강경 반발하면서 대립
  
- 미국이 2002.10.3~5 켈리 국무차관보를 대통령 특사로 평양에 파견하여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공식 북·미 대화가 열렸으나,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문제로 인해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 북·미 관계는 오히려 더 악화 국면을 맞게 됨.
  - KEDO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2002.12), 북한의 핵동결 해제(2002.12),

NPT 탈퇴(2003.1.10) 및 5MW 원자로 재가동(2003.2.26) 등으로 사태 악화

- 제2차 북핵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미국의 이라크 공격(2003.3.20)이 진행되었고 북한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과 대화할 용의를 밝힘으로써 미·북·중 3자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2003.4.23~25)되었음.
  - 그러나 회담 중 북한 대표의 '핵무기보유' 발언으로 결렬
- 이후 남한·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3차례(1차: 2003.8.27~29, 2차: 2004.2.25~28, 3차: 2004.6.23~26)에 걸친 회담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함.
  - 미국은 '북한의 선(先)핵폐기, 선(先)보상 불가' 입장 고수,
  - 북한은 '미국의 선(先)대북 적대정책 포기, 핵동결에 대한 보상' 주장
- 제4차 6자회담이 북한의 거부로 지체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부시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외무성 성명(2005.2.10)을 통해 '6자회담 불참 및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
  - 이어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2005.3.31)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 만큼 6자회담은 군축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
  - 북한 중앙방송(2005.5.11)은 5MW 원자로에서 8,000개 폐연료봉 추출 완료 보도
- 이후 중국, 한국 등의 중재로 4차 6자회담이 13개월 만에 개최(2005.7.26)되었고, 곧이어 2단계 4차 6자회담(9.13~19)에서 아래의 내용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발표함.

- 평화적 방식의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포기와 이른 시일 내에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협정에 복귀, 대북 경수로 제공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논의
- 미국은 핵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 북·미 상호주권 존중 및 관계 정상화 조치 추진, 북·일 관계정상화 조치 추진, 에너지·교역·투자분야의 경제협력, 대북 에너지 제공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레짐 협상 추진 등

○ 그러나 북한은 ‘9.19 공동성명’ 발표 다음날 외교부 대변인 담화(2005.9.20)를 통해 경수로를 먼저 제공하지 않는 한 핵 폐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함.

○ 한편, 미국 재무부는 4차 6자회담이 진행 중이던 2005.9.15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BDA)를 북한의 달러화 위조지폐 제조·유통 및 돈세탁과 관련하여 ‘우선적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함.

○ 5차 6자회담(2005.11.9~11)에서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원칙을 확인하였으나 차기회담 일정 합의조차 없이 폐회됨.

- 5차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 문제를 제기

○ 이후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으며, 미국은 북한의 위폐제조·돈세탁 등 불법행위에 따른 금융제재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함.

- 이에 따라 '9.19 공동성명' 이행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한 채 북·미 간 공방이 지속

## 2.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대북제재

- '9.19 공동성명' 도출 이후 6자회담의 교착 상황에서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6.1)를 통해 “미국이...압박도수를 더욱 더 높인다면...초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세를 높였으나, 미국은 북한의 양자회담 요구를 일축하면서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함.
- 이에 북한은 대외적 관심 촉발과 대내적 체제결속을 위하여, 단·중·장거리 미사일 7기를 시험 발사(7.5)함.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6기의 스커드·노동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
  - 함경북도 화대군 대포동에서 대포동-Ⅱ호 미사일 1기를 발사하였으나 실패
-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으나 광범위한 대북 강경여론을 확대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함.
  - 한국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 중이던 쌀, 비료 지원을 중단
  - 미·일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추진 및 중·러의 동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 및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 169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7.15)함.
  - 유엔회원국들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미사일과 관련 물품·재



### Ⅲ. 북한 핵실험과 동북아 4국의 반응

#### 1. 북한의 핵실험 실시

-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은 외무성 성명(2006.10.3)을 통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함.
  -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제재 책동’ 때문에 핵 억제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
  - 핵무기 선제 불사용, 핵무기를 통한 위협 및 핵무기 이전 불허 주장
  -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 주장
  
- 이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계획 포기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10.6)하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 1695호의 모든 조항들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그러나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지하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고 공식발표(10.9)함.
  - 2006.10.9 오전 10시 35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TNT 0.4~0.8kt 폭발 규모 핵실험 추정
  - 미국의 국가정보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공식 확인(10.16)함.
  
- 북한의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보유국가로의 등장은 김정일의 정권안보와 체제안보, 대미협상, 대남정책, 동북아 안보질서 등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옴.

-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9돌이 되는 8일과 노동당 창건 61돌이 되는 10일 사이에 핵실험을 실시하여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 능력을 과시하고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결속 강화를 기대함.
  - 국내적으로 핵실험을 김정일의 치적으로 선전해 정권 유지 및 체제결속에 활용
  
- 핵개발을 체제유지를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기대하는 최대목표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는 것임.
  - 1970년에 발효된 NPT가 공식 인정하는 핵보유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5개국
  - 인도와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 직후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았으나 9.11 테러사태 이후 핵보유가 묵인됨.
  
- 동시에 북한은 2005.2.10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장해온 것처럼 핵실험 실시 이후에는 핵무기 보유국 위상으로서의 군축회담 주장을 강화할 것임.
  - 자신의 핵실험이 “9.19공동성명에 모순되지 않으며 그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강변

## 2. 동북아 4국의 반응

### (1) 미국의 반응

- 북한의 핵실험 발표 직후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을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의 즉각적인 대

응을 촉구하는 대북성명을 발표(10.9)함.

-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외교적 해법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임을 강조

○라이스(Condoleezza Rice)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를 ‘핵 보유국이라는 협상 입지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규정하고, ‘핵실험이 확인되어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10.10)함.

- 또한 북한의 북·미 직접대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

○한편, 볼턴(John R. Bolton)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부시 대통령의 대북성명이 발표된 직후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제출

- 볼턴 대사는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놔두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외교적,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

## (2) 일본의 반응

○일본 총리에 새로 취임(9.26)한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북한의 6자회담으로의 복귀 등을 위해 대화노선을 견지하는 한편, 대북 금융제재 등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한·일정상회담(10.9) 직전 서울에서 북한의 핵실험 발표를 들은 아베 총리는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곧바로 엄중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힘.

- 일본 내각은 독자적인 추가 제재조치를 강구하기로 결정함.

-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일본은 미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초안보다 더 강도 높은 응징을 요구하는 대북 제재안을 독자적으로 제출함.
  - “일체의 북한 소속 선박 및 항공기의 왕래를 금지하고, 모든 북한산 물품의 수입을 중단 한다”는 내용 포함

### (3) 중국의 반응

-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지만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자,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반대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핵실험을 실시했다며 강력하게 비난(10.9)함.
  -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핵 확산 반대는 중국 정부의 확고하고 일관된 자세라고 강조
- 그러나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응징조치로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10.10)함.
  -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촉구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노무현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10.13), 북핵 문제 해결 및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키로 합의함.
  -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힘.

#### (4) 러시아의 반응

- 북한의 핵실험 의도 선언(10. 3) 시, 러시아 외무부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제적 핵비확산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핵실험 자제를 평양에 촉구하였음.
-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10. 9)하자 러시아 정부는 국제적인 핵 비확산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비난하였으나 유엔의 제재에 무력 사용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북한의 NPT체제 복귀 및 6자회담 재개 요구
- 실용적 접근법을 주장한 러시아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12,800톤의 곡물을 전달(10. 11)하였고, 6자회담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대안은 없다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하였음.

## IV.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 1.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10.9)를 개최하여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함.
  - 미국은 유엔 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한 대북제재안 제시
  - 일본은 추가적인 대북제재 내용을 담은 미·일 공동제재안 주장
  - 중국은 대북경제 제재를 찬성하면서도 외교적 해결 강조
  - 러시아는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면서도 대북제재를 요구하지 않음.
  
- 특히 중국은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유엔 헌장 7장을 원용은 하되 군사조치를 거론한 42조를 제외하고 41조만 명시할 것을 주장
  
-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10월 14일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군사조치가 배제됐으나 강력한 경제·외교적 제재를 내용으로 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전문과 17개 조항으로 구성
  
- 전문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NPT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규정함.
  - 또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상기함.
  
- 17개 조항은 전문 마지막에 나온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들을 취한다”는 문장 직후부터 시작됨.



- \* 유엔 헌장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41조와 4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
  - 41조에 따른 비군사적 강제 조치에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등이 포함됨.
  - 42조는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북한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한 규정(1~7항)은

- 북한의 핵실험 비난
- 추가핵실험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촉구
- NPT 및 IAEA 안전규정 복귀 촉구
-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 중지
-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
- 여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

○모든 회원국들은 아래 명시된 품목들이 북한에 제공·판매·이전되는 것을 금지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훈련, 서비스, 지원도 금지함(8항).

- 전차, 장갑차,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및 미사일 시스템 관련 물품
-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장비
- 사치품도 원산지를 불문하고 이전되지 못함.

○모든 회원국들은 또한 국내법 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즉각 동결함(8항).

- 각국 재량에 따라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자와 가족들의 입국, 경유를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
-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함.

○ 모든 회원국들은 이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이러한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함(11항).

○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 구성(12항).

- 위원회는 모든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 최소한 90일마다 이행상황 및 8항 조치의 효율성 강화 방안을 보고함.

\* 제재위원회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을 포함한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모두 15개국으로 구성되며, 결의 이행의 총괄적 실무 권한 행사

- 무기 및 사치품 관련 특정품목 금수 여부 결정,
- 북핵 관련 자산동결 대상의 개인 및 단체 지정,
- 북한 화물 해상 검문 등에 관한 구체적 이행방안 논의

○ 북한에 대해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와 2005.9.19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함.(14조)

## 2. 대북제재에 대한 각국의 입장

### (1) 북한의 대응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10.11)함.
  -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며 북한의 최종목표라고 언급함.
-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10.14)된 후 안보리 연설을 통해 “이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면 북한은 이를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10.17)함.
  -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원칙’을 고수해왔다면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을 강조함.

### (2) 미국의 대응

- 부시 행정부는 UN 안보리 결의를 기반으로 철저한 북한 ‘봉쇄 및 고립화’ 정책을 추구할 예정임.
  -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면 이란·시리아 등 ‘불량국가’의 핵개발을 막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우려
  - 북한이 핵폐기를 선언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

-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미 국무장관은 동북아 순방에 앞서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10.16)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는 모든 국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물질의 수출입을 막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국제 기준이라고 강조함.
- 미 국무부 관리들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협력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PSI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동·아태 차관보는 “개성공단의 목적은 경제개혁이라는 미래를 다루고 있다고 이해하지만 금강산관광의 목적을 같은 선상에서 보지 않는다”고 주장(10.17)함.
  -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10.19)에서 한국의 PSI 참여 확대 필요성 강조
- 북한이 2차 핵실험 실시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강력히 반발할 경우, 미국은 한국과 중국에 대해 대북제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요구할 것임.

### (3) 일본의 대응

- 일본의 대북정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에 적극 동참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화 협력아래 전개될 것인 바, 북한 지도층이 선호하는 품목의 수출 금지 조치, 금융제재의 강화, 선박 검사 등 대북제재 조치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갈 것임.
- 미·일동맹의 강화에 따른 일본의 전략적 역할 이행과 미·일공조체제의 강화 차원에서, 일본은 주일 미군의 선박검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및 자위대의 집단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입

법조치를 취할 것임.

- 정당방위라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가능

○ 아소 다로(麻生太郎) 외상은 일본을 방문한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개최(10.18)하고 북한 선박 검색 관련 실무협의 착수

- 라이스 국무장관은 “선박 검문검색은 선택이 아닌 강제적 의무사항”이라고 강조

- 일본은 미군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선박검사에 해상자위대의 호위함과 P3-C 초계기, 항공자위대의 공중경계정보기(AWACS) 등을 동원할 의사 표명

#### (4) 중국의 대응

○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대사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대해 단호하고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은 여전히 6자회담을 문제 해결의 현실적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

○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PSI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시행하는 데 있어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를 따르기 보다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임.

- 중국 선박에 대한 검색은 강화해 나갈 것임.

- 북한 선박의 해상화물 검색에 대해서는 반대함.

○ 중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민간 교역의 확대를 보류시키고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이중 물자에 대해서는 통관을 철저히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

-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관

금지

- 2006~2010년 지원하기로 약속한 정부 차원의 무상지원 중단
-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지만 원유 등 핵심 물자는 단계적 지원 축소

○그러나 북한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는 중국은 전면적인 대북 경제 봉쇄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석유·전력 등 에너지 공급을 단계적으로 감축
-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는 점진적으로 위축될 것임.

○북한 핵실험은 중·북 우호조약에 명시된 “양국의 중요한 사안은 사전에 합의하여 행동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인 바, 외교 차원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로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대북 무력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할 것임.

- 중국은 중·북 우호조약 수정이나 폐기를 북한에 요구하지는 않을 것임.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로 평양에 파견된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개최(10.19)하고 북한의 2차 핵실험 계획 포기 및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함.

## (5) 러시아의 대응

○러시아 정부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10.14)을 ‘비편파적이고 균형 잡힌’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핵 및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잠재력을 억제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나 무력사용을 호소하지 않고 있음.

- 러시아는 북한의 NPT와 6자회담 복귀, 추가적인 핵실험 방지 등을 위해 북한을 직접 설득하는 한편, 한·미·일·중 등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상황을 완화시키고자 할 것임.
  - 평양을 방문했던 알렉세예프 차관은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이후 6자회담을 포기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함(10. 15)으로써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음.
  
-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거나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는 경우, 러시아 정부는 더욱 엄격한 핵비확산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임.
  -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외교적 수단의 사용, 국제무대에서 법의 지배를 통한 약소국의 안전보장, 비차별적인 민수용 핵기술의 접근 허용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는 PSI에 참여하고 있으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정도의 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측됨.

## V. 정책적 고려사항

- 북한의 핵실험은 ‘정부 성명’(10.9)대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며,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짓밟는 행위”이자,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임.
-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단호하고 엄중한 입장 표명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북핵 폐기 실현 의지를 북한이 더 이상 ‘무시’ 또는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혼동된 해석이 정부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
-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내용이 밝히고 있듯이 대북 제재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인하여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 바, 우리 정부의 유엔 안보리의 결의 이행도 이에 충실히 부응하는 것임.
  - 대북 제재결의 이행이 평화적 해결의 지향이 아닌 한반도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
-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통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향적 자세를 갖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되,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를 ‘지나간 일’로 면책해주는 방식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정부의 ‘단호한 대처’ 의지는 또한 ‘한·미동맹을 바탕’,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 등 약속을 충실히 이행·실천하는 방향에서 집행되어야 함.

-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의 내용과 ‘제재위원회’가 규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행
- 기존의 남북 간 거래행위들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 내용과의 상충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위배되는 경우는 재조정

○ 유엔의 대북제재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우발적 사건들에 의해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북한 선박의 해상화물 검색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 북한의 취약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북핵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만약 유엔의 제재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핵도미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강화

○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계속 주장하면서 ‘협상을 통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기 위한 대미접근으로 판단되는 바, 6자회담 복귀와 그 틀 속에서의 북·미 양자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함.

- 북·미 양자만의 직접대화를 갖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명백한 상황에서 북한의 주장대로 6자회담 바깥에서의 북·미 직접대화를 미국에 계속 설득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과의 면담(10.19)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추가 핵실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향후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임.
  - 미국은 물론 한국, 중국 등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불리한 현 상황을 일단 완화하려는 의도
  
- 중장기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재개·지속을 위해서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응한 군사적 억제전략을 선택해야하는 바,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한국의 핵무기 개발 선택 대안은 한·미협력을 통한 핵우산 강화 억제전략과는 달리 바람직한 대안은 아님.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행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행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2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2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1 (2006)	10,000원

###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근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Ⅱ)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근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북한인권 :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

##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통일정세분석 2006-11

---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7, 팩스 : 901-2543
인쇄처	도서출판 늘봄 전화 : 2275-5326
인쇄일	2006년 10월 일
발행일	2006년 10월 일

---